

##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실증분석\*

최 유 진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이며 분석모형은 패널모형(2010년~2015년)을 활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이다. 창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적 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군집분석(K-평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시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 기업이 1개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가 모두 큰 기초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패널분석, 패널회귀모형

## I.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새롭게 부활한 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정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직후 직면한 IMF 경제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욕과 비전을 상실하게 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곧 소득과 소비 감소에 따른 정부 재정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신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개발과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경제 부문과 정부 재정의 건전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경제 위기를 탈출했지만 2000년대 중반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바로 이어진 금융위기 및 세계적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고착화했다.

이런 배경 속에 사회적경제 영역은 점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복지 영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정부와 시민 사회의 욕구가 서로 맞아떨어

\* 이 논문은 2016년도 강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란 주식을 많이 소유한 일부 주주에게 이익 대부분이 귀속되는 전통적 개념의 경제체제와는 달리, 경영 목적의 측면에서 경제 활동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고르게 분배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기업의 사주나 임원 등 일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의사결정 과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Zhao, 2013; Fridell, 2009; Henry & Sills, 2006; Lippens & Ponsaers, 2006). 또한, 사회적경제 체제 안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조직화된다(최유진, 2017; 김경희, 2013; 류만희, 2012; 김영철, 2011).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네 개의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시장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사회의 제도화와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탄생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이다(이은선·이현지, 2017).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조직체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조직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시민사회의 고민과 최소한의 재정 지출로 지역의 개발 및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싶은 정부의 욕구가 적절한 타협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사회적기업은 제도권으로 편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낙후된 지역경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이며 분석모형은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이다. 창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적 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을 모형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고전적 성장이론, 케인지안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등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군집분석(K-평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시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현황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주요 조직체 중 하나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체와 근거 법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인증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체

유형	근거 법률	주무 부처	포털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socialenterprise.or.kr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coop.go.kr
마을기업	없음	행정자치부/지자체	cbhub.or.kr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지자체	없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비영리 기관(non-profit organization)과 전통적 기업(commercial company)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조직체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과 사회적 책임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조직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사회적기업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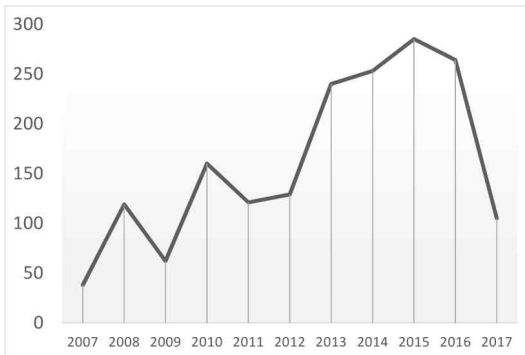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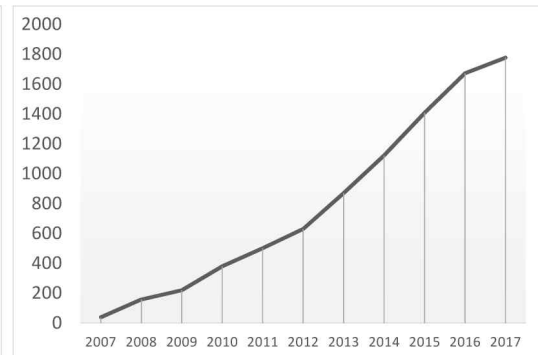
2) 사회적기업의 현황

다음의 〈그림 3〉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획득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추이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는 누적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과 2011년에 인증의 수가 하락한 적이 있어 도 대체로 인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증제도 시행 2년 차인 2008년과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누적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4〉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창업 열기가 꺾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사회적기업 인증 추이(2017년 7월 현재) 〈그림 4〉 사회적기업의 누적 정도(2017년 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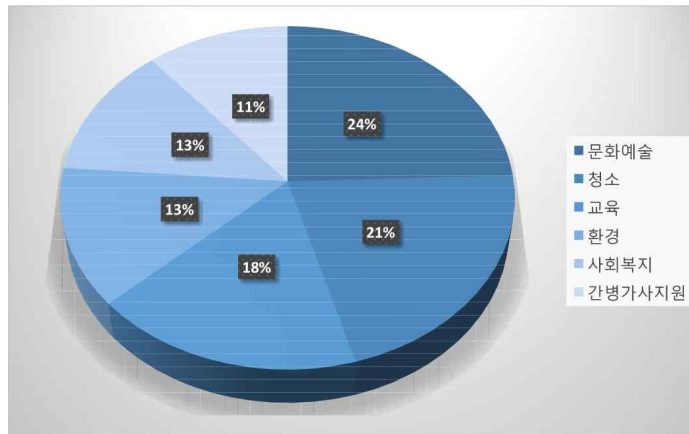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다음의 〈그림 5〉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활동 분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는데 비중이 10% 이상인 분야는 문화예술, 청소, 교육, 환경, 사회복지, 간병가사지원 등이다. 이 중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총 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뒤로 청소와 교육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분야가 사회적기업의 주력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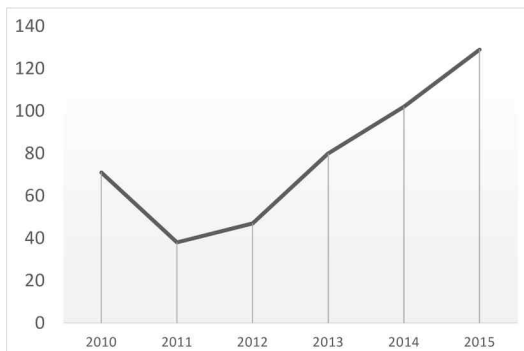
〈그림 5〉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 분야(2017년 7월 현재)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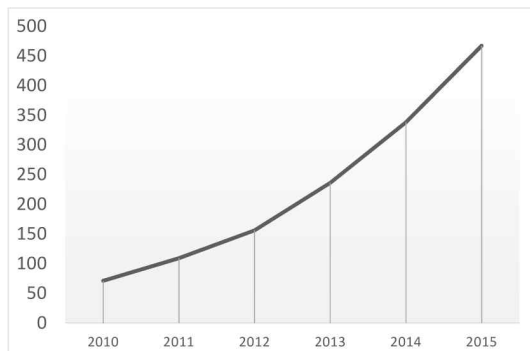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 6〉은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우리나라 기초시의 사회적기업 인증 수를 연구 기간인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그림 7〉은 같은 기간 사회적기업의 누적 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인증 업무가 시작된 직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수는 주춤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초시 안의 누적 수는 비슷한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적지 않은 기초시와 광역시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업무를 지원하였다(최유진, 2017).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사회적기업 영역의 실질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기초시의 사회적기업(인증 수)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림 7〉 기초시의 사회적기업(누적 수)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 2. 사회적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본 연구의 필요성

과연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Dumitru(2013)의 주장처럼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새로운 영역에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지만 이 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한 가설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연구 논문은 적지 않다.

먼저 Evans & Syrett(2007)는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자본은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 자본의 형성 과정과 재형성 과정을 추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사회 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질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Richards & Reed (2015)의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Richards & Reed는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창업의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Weaver(2016)는 사회적기업은 주로 자신을 고용하는 경우(self-employed)가 많은데 이는 도시 안의 주민에게 경제 활동 참여의 의지를 고취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인적 자원의 개발까지 이루어져 설사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Sherri(1999)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책임자를 사회적 기업가로 꼽은 바 있다. 그의 주장은 간명하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Sherri는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역의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한 애착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지역경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학계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특별히 본 연구와 같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향성을 판단할 만큼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다. 우선 최희용 외(2016)는 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별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조절효과가 문화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지 혹은 억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문화자본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는 아니지만, 심원섭(2017)은 대안적 관광발전론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지역적 의미와 그 역할에 관해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가 갖는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의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 바 있다. 이론적 논의 외에도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내생적 성장 효과의 관계를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한편, 이상면(2015) 역시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상면(2015)은 연구에서 사회적경제가 내생적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슬로시티, 에코뮤지엄, 지역화폐 등과 같은 대안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역시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역경제 성장 요인에 관한 전형적인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채택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한 연구라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경제 혹은 지역발전의 관계를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혹은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메커니즘을 규명하려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증 모형을 구성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내고자 한다. 둘째, 최희용 외의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패널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인증이 시작되어 다년간 지역 사회에 누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널분석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 셋째, 기존의 연구가 주로 내생적 성장 이론에 근거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이 연구는 지역 개발에 관한 이론을 총망라하여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 3. 지역경제 활성화 이론의 탐색

전술한 바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체가 누적될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단순히 사회적경제의 변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이를 추출하여 모형에서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론을 고전적 성장이론(classical growth theory), 케인지안 성장이론(Keynesian growth theory),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핵심이 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패널모형에서 통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전적 성장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노동력의 공간적 분화'라 할 수 있다(Szajnowska-Wysocka, 2009). 경제기반이론(theory of economic base)에 따르면 지역의 경제는 크게 기반부문(basic sector)과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으로 나눌 수 있다. 기반부문은 외부로 수출되는 경제 영역인데 반하여 비기반부문은 지역 내의 자생적 활동으로 인한 경제 부문이다(Tsoufidis, 2017). 고전적 성장이론에서는 기반부문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가며 비기반부문은 기반부문의 잉여(residual)인 것처럼 간주하였다. 수출을 매우 중요시하는 고전적 성장이론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지역 외부와의 재화의 교환이 증가하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기업의 생산성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노동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역 간 노동력의 분화 정도가 지역의 경제력 차이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광수, 2008). 국가 단위가 아닌 한 지역에 노동력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지 지역 단위에서는 인구의 증가나 숙련된 노동자 수의 증가 정도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James & James,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과 외국인 수의 증가로 고전적 성장이론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인구요인의 경우 이상호·김홍규(1996)의 연구나 오세운·홍준현(2013) 등의 연구에서 고전적 성장이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바 있다. 해외 학계의 경우 외국인 수의 비중은 주로 사회적요인으로서 다양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국인의 구성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혹은 결혼 이주 여성이므로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유광철·오동훈,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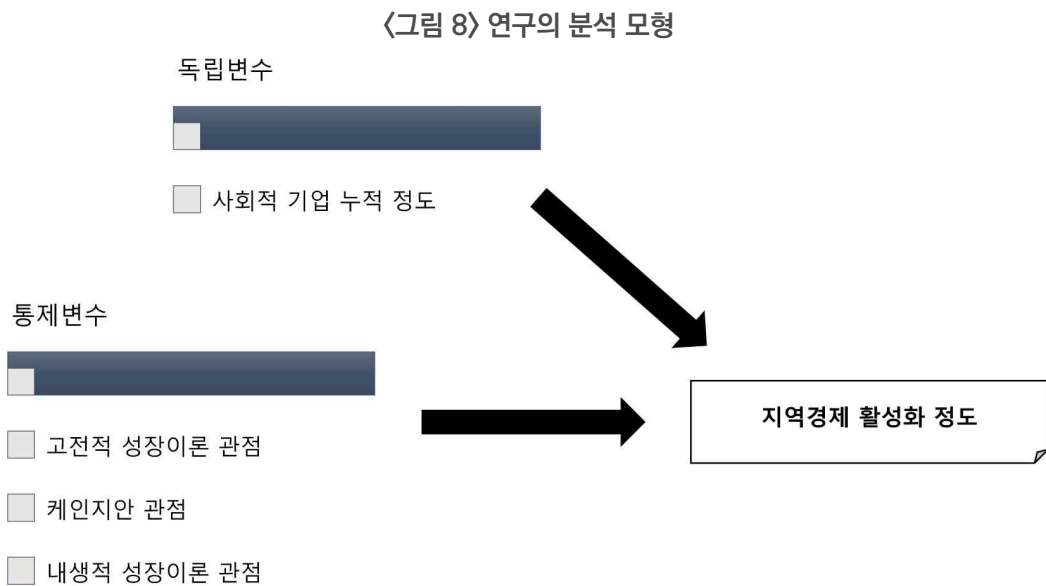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은 케인지안 성장이론을 근거로 설명되기도 한다. 고전적 성장이론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공급 요인으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케인지안 성장이론은 고전적 성장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Öner, 2015). 고전적 성장이론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제 활성화에 관한 매우 비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나 케인지안 성장이론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Öner, 2015). 다시 말해, 현실에서의 불완전 고용은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다(Tsoufidis, 2017). 케인지안 성장이론은 대공황 시대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적절한 시장 개입과 재정지출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의 구축에서 중소기업 등 산업 부문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등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동진·홍준현, 2015; 강운호, 2008; 박지형·홍준현, 2007).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통제 변수의 선정을 위해 검토한 이론은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고전적 성장이론에 의해 경제활동의 잉여 정도로 여겨졌던 비기반부문 중 외부의 자극이 없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는 이론이 바로 내생적 성장이론이라 할 수 있다(Mishra, 2016). 제3차 산업 혁명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북유럽의 일부 국가가 고전적 성장 이론이나 케인지안 성장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내생적 성장이론의 현실 적합성에 관한 실증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Mishra(2016)는 기존의 지역경제 성장이론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에 있어 '교육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은 과거 노동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인적자본의 교육 수준이 바로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이다(Mishra, 2016). Plummer & Taylor(2004)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지역경제 성장의 큰 동력을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데 정부 역시 기업이 정신으로 무장한 사업가의 출현을 위해 정책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에 앞서 Wenckers & Thurik(1999) 역시 기업이 정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논거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Florida(2005) 역시 비록 인과성의 모호함을 비판받고 있지만, 높은 교육 수준과 소비 수준을 지닌 창조적 계급에 의해 지역이 성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내생적 성장이론은 지역경제의 분화를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Mishra, 2016). 이 이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역량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본의 증가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병근·김성욱, 2012; 권기정, 2007).



#### 4. 연구모형

다음의 <그림 8>은 연구의 분석 모형이다.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기업의 누적 정도이며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는 커진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가설이 된다. 전술한 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영향 요인을 모형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고전적 성장이론과 케인지안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 등을 근거로 통제변수를 선정한다.



### Ⅲ. 연구의 방법론

#### 1. 분석의 단위와 변수

##### 1) 분석의 단위

연구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이하 기초시)이다. 이 연구에서 기초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군(이하 기초군)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효과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기초군은 제외하고 기초시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구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보다 광역시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구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치군 역시 연구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총 70개 기초시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

년에 걸친 정보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분석 단위의 총 개수는 420(70×6)개이다. 분석 단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해당 기간 인근 지역과 통합한 청주시와 창원시 그리고 군에서 시로 승격된 여주시와 특수 목적으로 설치된 계룡시 역시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종속변수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인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는 지역 주민의 소득(income)에 관한 지표이다. 미국의 경우 census group 단위별로 가계의 중위 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이 측정되어 카운티 정부나 도시정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소득세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지만, 분석 기간 중 세율의 변동이 있으면 내적 타당성의 손상이 발생한다. 주민세 중 소득 할 부분을 지방소득세로 편입한 것이 2013년이다. 따라서 2010년부터 연구의 기간이 시작되는 이 연구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활용할 수 없다. 기업의 생산력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GRDP의 경우 지역 주민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14년까지만 수집되고 있어 2015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이 연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이상의 지표를 제외하면 가장 적합하게 고려할 수 있는 변수는 고용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변수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15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확산은 지역의 일자리 증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적이 지역 사회의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을 비추어볼 때 가장 적합한 변수가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

## 3)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다음의 <표 1>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지표 설명과 출처, 기술통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대로 독립변수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의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기업의 수(SE\_PER)'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6년간의 자료가 구축되었는데 연도별 창업 건수로 측정하지 않고 연도별 누적 건수로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만약 A 기초시의 사회적기업이 2009년까지 5개 인증을 받고 2010년에 1개 인증을 받았다면, 2010년에는 총 6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코딩한 것이다. 단순히 발생 건수로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측정하게 되면 1년 이상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한 사회적기업의 노력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누적 건수를 활용하였다.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기업의 평균은 약 1.54개이며 표준편차는 1.55개이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을 모형에서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한 통제변수는 지역경제 활

성화 이론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먼저 인구증가율(POPG)과 외국인 수(ALIENS)는 모두 지역의 노동력의 규모와 관련이 큰 지표이다. 고전적 성장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역 내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하여 지역경제는 활성화된다. 노동자의 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는 바로 인구의 증가와 외국인 수라 할 수 있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은 결혼 이주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기초시의 외국인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증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의 평균은 약 0.89%이며 표준편차는 2.15%이다. 케인지안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정한 변수는 산업중소기업 부문 지출과 국토 및 지역 개발 지출이다. 이 두 변수는 모두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성장, 특히 산업 부문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이다. 주민 1인당 산업중소기업 지출의 평균은 약 71,232원이며 표준편차는 88,247원이고, 주민 1인당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의 평균은 약 244,917원이고, 표준편차는 177,633원이다. 마지막으로 내생적 성장이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정한 변수는 ICT 종사자의 수와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의 수이다. ICT 종사자 군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대학교의 경우 산학 협력과 지속적인 인력 배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물론 두 변수 모두 지역 내 소비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민 십만 명당 ICT 종사자 수의 평균은 약 412명이며 표준편차는 약 556명이고, 주민 만 명당 대학 수의 평균은 약 0.1개이고 표준편차는 약 0.08개이다.

〈표 1〉 변수의 설명과 출처

변수 유형	약자	설명	출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SE_PER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기업의 수(누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41개	1.549개
	POPG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	행정자치부	0.885%	2.152%
	log(ALIENS)	주민 천 명당 외국인 수의 자연로그	행정자치부	20.124명	15.141명
	log(INEXP)	주민 1인당 산업중소기업 지출의 로그	지방재정 365	71,232원	88,247원
	log(LDEXP)	주민 1인당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의 로그	지방재정 365	244,917원	177,633원
	log(ICT)	주민 십만 명당 ICT 종사자수의 로그	사업체 총조사	412.161	556.258
	EDUS	주민 만 명당 전문대학 이상 고등기관 수	한국교육개발원	0.097	0.084
통제변수	D2	강원지역 더미	NA	42	
	D3	충북지역 더미		12	
	D4	충남지역 더미		42	
	D5	전북지역 더미		36	
	D6	전남지역 더미		30	
	D7	경북지역 더미		60	
	D8	경남지역 더미		42	
	종속변수	y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D1은 경기도 지역 더미로서 빈도수는 162개이다. 통계모형에서는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로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 정규성 가정에 충족하기 위하여 음(-)의 값이 존재하는 POPG와 0이 다수 존재하는 EDUS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변수에는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다만, 평균과 표준편차는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는 값으로 계산되었다.

## 2. 군집분석의 활용과 패널모형의 설정

### 1) 군집분석의 활용

이 연구는 모든 기초시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기초시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모형을 구분하여 효과를 비교한다. 기초시를 유형화하여 회귀모형을 각각 추정하는 이유는 기초시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차이날 수 있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시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활용한 변수는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적기업의 누적 수'이다. 두 변수를 활용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크고 사회적기업 역시 많은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는 크지만, 사회적기업의 수가 적은 지역 등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수 있다. 기초시의 유형화를 위해 활용한 군집분석 방법은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 전에 도출할 군집의 수를 정하여야 하는데 유형화를 위해 활용한 변수가 2개이므로 군집의 수는 4개로 사전에 정하여 기초시를 유형화한다. 다음의 <표 2>과 같이 군집을 A부터 D까지 도출하여 각각의 패널모형 추정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표 2> 군집분석의 유형화

구분		사회적기업 누적 정도	
		높음	낮음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높음	A군집	B군집
	낮음	C군집	D군집

### 2) 패널모형의 설정

이 연구의 기본적인 패널모형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형은 전체 기초시를 대상으로 한 추정과 군집분석의 결과 도출한 군집별 추정에 동일하게 사용된다.

$$y_{i,t} = x_{i,t}\beta_x + c_{i,t}\beta_c + d_{i,t}\beta_d + v_{x,c} + \mu_d + \epsilon_{i,t}$$

이 모형에서  $y$ 는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x$ 는 사회적기업의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의 누적 정도를 나타내는 벡터이다.  $\beta_x$ 는  $x$ 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c$ 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거가 되는 이론을 통해 추출한 통제변수의 벡터이며,  $\beta_c$ 는  $c$ 의 회귀계수가 된다. 두 벡터  $x$ 와  $c$ 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변하는 변수의 벡터라 할 수 있다. 한편,  $d$ 는 지역터미 변수의 벡터이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인 기초시가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beta_d$ 는  $d$ 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i$

는 관측치( $N$ )를 의미하며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 회귀모형의 특이한 점은 오차항이 세 개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v_{x,c}$ 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x$ 와  $c$ 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며,  $\mu_d$ 는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변수인  $d$ 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그리고  $\epsilon_{i,t}$ 는 모형 전체의 오차항이다.

위의 패널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v_{x,c}$ 와  $\mu_d$ 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mu_d$ 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바로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선형회귀분석과 선형패널 분석의 차이가 발생한다(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4). 만약  $\mu_d$ 를 확률변수로 간주한다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오차항을 제거하고 설명변수를 고정하고자 한다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모형 중 더욱 신뢰할만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모형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은  $\mu_d$ 과  $x_{i,t}$ 간의 상관성을 검정한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면 고정효과모형을, 기각할 수 없으면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해야 한다(전승훈·강성호·임병인, 2004).

## IV. 패널모형 추정의 결과

### 1.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

다음의 <표 3>은 K-평균 군집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대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사회적기업의 수가 군집을 위한 기준 변수로서 활용되었으며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K-평균 군집 분석을 위해 표준화 점수를 활용하였다.

A유형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며 사회적기업의 수도 많은 기초시인데 총 16개의 기초시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D유형은 반대로 두 변수 모두 낮은 추정치를 나타내는 기초시인데 총 18개의 기초시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또한, B유형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사회적기업의 수는 적은 기초시로서 총 35개의 기초시가 이 유형에 속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C유형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사회적기업의 수는 많은 지역인데 오직 하나의 기초시만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일종의 극단 값(outlier)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A, B, D유형에 속한 기초시 별로 각각의 추정 결과를 도출하지만 C유형은 단 하나의 기초시만 속하였으므로 추정하지 않는다.

〈표 3〉 군집분석의 결과

구분	유형	개수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적기업 수
군집 1	A	16	0.938	0.479
군집 2	B	35	0.153	-0.465
군집 3	C	1	-1.181	6.130
군집 4	D	18	-1.283	-0.125

- 경제활동 참가율과 사회적기업 수(주민 십만 명당)의 기술통계는 표준화 점수임

## 2. 패널모형 추정결과

다음의 〈표 4〉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기초시의 추정 결과와 함께 C유형(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사회적기업의 수는 많은 기초시)을 제외한 A유형(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고 사회적기업의 수도 많은 기초시), B유형(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사회적기업의 수는 많지 않은 기초시), D유형(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사회적기업의 수도 많지 않은 기초시)의 패널모형을 각각 추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패널모형을 활용하였으므로 OLS 모형과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추정해야 한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전체 기초시는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유형과 D유형은 확률효과모형이, B유형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고정효과모형에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종속변수의 37%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확률효과모형에서는 49~60% 설명하고 있었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더미 변수를 모두 모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결정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사회적기업 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체 기초시와 B유형 기초시 그리고 D유형 기초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시의 결과가 B와 D유형에 속한 기초시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계수는 대체로 2~3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인구 십만 명당 사회적기업의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D유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낮고 사회적기업 역시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지역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유형은 지역경제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수 역시 많지 않은 지역이다. 이 유형은 D나 C유형에 비해 지역경제 상황이 좋을 뿐 A유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유형에 속한 기초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유형에 속한 기초시는 경제 활성화 정도가 매우 크며 사회적기업 역시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사회적기업 영역이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지역일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외국인 수는 전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기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긍정적 효과가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구 증가율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의 상황이 좋은 기초시는 오히려 인구의 증가가 경제 활성화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역시 비교적 경제 활성화 정도가 크지 않거나 낮은 기초시에서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지만 A유형 기초시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큰 기초시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ICT 종사자의 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학의 수는 오히려 A와 D유형에 속한 기초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패널모형의 추정 결과

Variables	전체	A	B	D	VIF
(Intercept)		62.165***		49.921***	
SE_PER	3.007***	-1.750	2.361*	2.903***	1.950
POPG	0.138*	-0.342***	0.104*	-0.236	1.401
log(ALIENS)	1.690***	1.629**	0.939***	1.160*	2.006
log(INEXP_PER)	0.541***	-0.016	0.150*	0.498**	2.229
log(LD_EXP_PER)	0.701***	-0.121	0.983*	0.265*	1.533
log(ICT_PER)	-0.111	-0.450	0.149	0.489	1.401
EDUS_PER	-5.137	-4.866***	1.315	-13.051***	1.509
D2		-2.093			2.272
D3				-3.964***	1.348
D4		-0.104		-1.220	1.459
D5		0.883		-1.689	1.921
D6		5.781*		4.744***	1.708
D7		0.614		-1.151	2.304
D8		-1.988		-2.393**	1.329
T2	0.843*	0.648	0.644	0.691	1.728
T3	1.392***	1.358**	1.457***	1.244**	1.802
T4	1.510***	2.005***	1.929***	1.693**	1.897
T5	1.745***	2.504***	2.571***	2.179***	2.093
T6	1.073**	2.231**	2.498***	1.712*	2.353
적합모형	고정	확률	고정	확률	
하우스만 검정	24.980**	3.347	27.083***	10.683	
R-Squared	0.374	0.489	0.361	0.599	
F	12.139***	4.445***	4.616***	5.012***	

- 제시된 값은 회귀계수임
- \*, \*\*, \*\*\*는 0.1, 0.05, 0.01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더미변수의 결과를 추정하지 않으므로 전체 모형과 B모형에서는 D2~D8까지의 변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전체 모형의 OLS 모형 결과로 계산하였음
- T2~T6는 분석 모형에서 시간을 통제하였음을 의미함. T2는 2011년이며 T3는 2015년이고, T1은 연구 모형에서 삭제되었음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이며 분석모형은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었으며 주요 독립변수는 해당연도 사회적기업의 수(누적)이었다. 전체 기초시의 추정과 더불어 기초시 유형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기초시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유형별로 패널모형의 결과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의 추정결과,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기업이 한 개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2~3% 증가하였다. 지역 주민이 약 50만 명이라고 한다면 5개의 사회적기업이 창업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2~3%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최희용 외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조선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결과는 지역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수에 따라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크고 사회적기업의 수도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크고 사회적기업의 수가 적은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낮고 사회적기업의 수도 적은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존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행정의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높고 사회적기업의 수 역시 많은 지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큰 기초시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초시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기초시는 이미 지역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복지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안에 다양한 경제주체가 활동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질성이론(heterogeneous theory)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복지 공급에 있어서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Nissan 외, 2012). 이는 곧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체의 활동은 폭넓은 분야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정부의 재정적 능력을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성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반면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은 기초시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낮은 기초시는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통적 의미의 기업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요원한 지역이므로 사회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의 역할로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많은 지역이다(Salamon 외, 2000). 이런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주요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한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에서부터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과 사회적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제일 중요한 지표로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수익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재정지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가 낮은 기초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활성화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지속적 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나 기타 사회적경제 협의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위치한 고등교육 기관 등이 협업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등교육 기관은 해당 학교가 배출한 우수한 인력이 사회적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관내 기타 사회적경제 주체와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큰 비용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존속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6년까지 지역 안에 존속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어디까지 추정이다. 만약 이 기업이 2013년 즈음에 파산했다면 코딩 값이 달라져야 한다. 둘째,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을 표방하며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매우 많지만, 그중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자료 수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셋째, 패널 모형 연구의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과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효과를 통제하거나 분석 모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만하다. 넷째,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고전적 성장이론의 중요 변수인 자본의 영향력이 연구에서는 통제되지 못하였다. 이는 시군구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단위로 하는 이 연구의 구조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는 단순히 사회적경제나 지역의 미시적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터미 변수로 통제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였다.

## 참고문헌

- 강운호. (2008).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365-381.  
 권기정. (2007). 인적자산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성장모형의 검증. 『국제회계

- 연구」, 20: 275-294.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광수(2008). 애덤 스미스: 사회적 평판의 경제심리, 수요 및 경제성장. 「국제경제연구」, 14(3): 195-222.
- 김영철. (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류만희. (2012). 사회적 기업의 지역개발 기능과 시장형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6: 75-104.
- 문동진·홍준현. (2015). 도시 규모와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다양성의 영향력 차이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9(3): 125-152.
- 문병근·김성욱. (2012). 지방교육재정지출 및 지역인적자본형성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4(2): 103-123.
- 박지형·홍준현. (2007). 시군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167-196.
- 심원섭. (2017).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본 내생적 지역관광발전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관광학 연구」, 41(6): 101~125.
- 오세운·홍준현. (2013). 기반산업육성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7(3): 119-144.
- 유광철·오동훈. (2014).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71-91.
- 이상면. (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지역개발연구」, 47(2): 87~119.
- 이상호·김홍규. (1996). 도시별 집적경제효과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8(1): 55-70.
- 이은선·이현지. (2017).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 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109-138.
-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4). 선형패널자료 분석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통계연구」, 9(2): 1-24.
- 최유진. (2017). 사회적 경제 증진 조례의 협동조합 활성화 효과: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지방행정 연구」, 31(2): 299~326.
- 최희용·정문기·이규명 (2016). 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경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1): 109~139.
- Dumitru, R. (2013). Social Economy - A Solution to the Labor Market Inclusion, Anuarul Institutului de Cercetari Economice, 22(1): 53-60.
- Evans, M. & Syrett, S. (2007). Generating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4(1): 55-74.
-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Y: Routledge.
- Fridell, G. (2009). The Co-Operative and the Corporation: Competing Visions of the Future of Fair Trad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6: 81-95.
- Henry, S. & Sills, S. (2006). Informal economic activity: Early thinking, conceptual shifts, continuing patterns and persistent issues - a Michigan stud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45: 263-284.
- James, R. D & James, A. C. (2015). Regional Income Convergence in Appalachia: Exploring the

- Factor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Transitioning Economy, *Southeastern Geographer*, 55(2): 164-192.
- Lippens, R. & Ponsaers, P. (2006). Re-visiting the informal economy: Introductory notes, *Crime, Law and Social Change*, 45(4-5): 259-261.
- Mishra, S. (2016).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Role of Education, *Splint International Journal of Professionals: A Monthly Peer 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 IT*, 3(10): 74-78.
- Nissan, E., Castaño, M. and Carrasco, I. (2012). "Drivers of non-profit activity: a cross-country analysis". *Small Business Economics*. 38(3): 303-320.
- Öner, E. (2015). Comparative Interpretation of Classical and Keynesian Fiscal Policies (Assumptions, Principles and Primary Opin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 Banking Studies*, 4(2): 11-20.
- Plummer, P. & Taylor, M. (2004). Entrepreneurship and human capital: distilling models of local economic growth to inform policy,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1(4): 427-439.
- Richards, A. and Reed, J. (2015). Social capital's role in the development of volunteer-led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Journal*, 11(1): 4-23.
- Salamon, L. M, Sokolowski, S. W., and Anheier, H. K. (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Working Paper of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no. 38, Th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Baltimore.
- Sherri L. W. (1999), Social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social purpose enterprises in facilitating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4(2): 153-174.
- Szajnowska-Wysocka, A. (2009). Theories of 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 - Abridged Review Bulletin of Geography, Socio-economic Series, 12(12).
- Tsoufidis, L. (2017). Economic theory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Philosophical Economics; Bucharest*, 10(2): 102-124.
- Weaver, R. L. (2016). Social enterprise self-employment programs: A two-dimens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strategy, *Social Enterprise Journal*, 12(1): 4-20.
- Wennekers, S. and Thurik, R. (1999). Linking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13(1): 27-55.
- Zhao, L. (2013). Conceptualizing the Social Economy in China, *Modern Asian Studies*, 47(3): 1083-1123.

최유진(崔維眞): 중앙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을 거쳐 현재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로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지역경제 등이다(echoi0816@icloud.com).

## Abstract

###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on Local Economy in Korean Municipalities

Choi, Eug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The unit of the analysis in the study is Korean local city government, and the analysis model is the panel model (2010~2016). The indicator for measuring the degre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is th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y that best reflect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ocial enterprise, and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by year in city governments. According to panel estimation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per 100,000 residents increased by 2~3%.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local economic development, panel analysis, panel regression model